

2007년 8월 9일 시행 국가직 헌법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국가직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한 문제이며 기본적인 문제를 법이론의 기초를 출제
한 것이 특징입니다

채한태헌법(박문각발간)이나 맥헌법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빈도 일람표

구 분	시행연월일		2007. 8.9	2006. 8.11	200 5.8. 9	200 4.8. 7	200 4.3. 20	200 1.3. 25	계
대단원		시행처	국가 직 7급	국가 직 7급	국가 직7 급	국가 직7 급	법원 서기 보	법원 서기 보	
		문항수	20	20	20	20	25	25	130
제1편 헌법 서 론	1. 헌법의 일반이론		1						1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1	1		1	4
	소 계		1	1	1	1		1	5
제2편 대한민 국 헌법	1. 헌법의 제정·개정에 대 한 내용 및 북한의 헌법					1	2		3
	2. 헌법의 보장					1			1
	3.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 가의 형태		2	1			2		5
	4.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 본원리				1			2	3
	5.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제도		2	1	3	2	1	2	11
	소 계		4	2	4	4	5	5	24
제3편 기본권	1. 기본권의 총론		2	2	1		1	1	7
	2. 포괄적 기본권				1	2	2	1	6
	3. 자유권적 기본권		2	6	1	2	3	3	18
	4. 사회권적 기본권		1	1	1		1	2	6
	5. 청구권적 기본권				1	2	1	1	5
	6. 참정권			1					1
	7. 국민의 헌법상 의무						1		1
	소 계		5	10	5	6	9	8	43
제4편 통치구 조	1.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1	1			1	3
	2. 입법부		3		3	2	4	2	14
	3. 대통령		4	2	2	3	1	1	13
	4. 행정부				1	2	2	2	7
	5. 사법부		1	1	1		2	4	9
	6. 헌법재판소 이론 및 판 례			3	2	2	2	1	10
	7. 선관위, 감사원		2						2
	소 계		10	7	10	9	11	11	58

2. 출제경향

(1)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헌법의 개념 및 특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출방식, 국회의회의원칙, 경제적 기본질서, people론과 nation론 주권의 특징,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 수 있다.

(2)

시사적인 내용 출제

→국가인권위원회조사대상, 선거권에서 선거연령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국회의 입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3)

헌법 조문과 부속법률의 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국회의회의원칙에서 헌법 제50조 규정, 국회법 규정, 사면법의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4)

기출문제의 유사적인 내용

→사법부의 독립, 헌법의 특징, 1787년 미국헌법의 기본권 규정 유무, 소위원회규정 등을 들 수 있다.

(5)

최신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인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선거권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2007.6.28)과 사면권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유무, 위헌결정의 효력 등을 출제 하였다.

3. 2008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론에는 왕도가 없으나 효율적인 방법은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학습법은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 헌법조문을 수시로 낭독하라, 헌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바란다.

둘째 :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해야 한다.

셋째 :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한다.

넷째 :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헌법관련 개정된 법률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문1. 연방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방헌법은 주(州)들 간 조약규범으로서 잠정적 성격을 가진다.
- ② 주(州)도 주권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 ③ 국가인 이상 연방국가의 통치권은 단일불가분의 성격을 가진다.
- ④ 연방은 주(州)의 국제법 위반의 책임까지 부담한다.

정답 ④

해설)채한태헌법 총론 p190 / 맥헌법 상 p183

- ① 연방헌법은, 국가연합의 조약과 달리 확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 ② 주권은 불가분적이다.
- ③ 통치권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통치권은 분할가능하다.
- ④ 연방국가의 각 주는, 국가연합의 개별국가와 달리 국제법적인 주체는 될 수 없으며 연방은 주의 국제법위반에 대하여 책임진다.

문2. 헌법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경성(硬性)헌법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 ② 성문헌법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갖는다.
- ③ 경성헌법은 헌법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요구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④ 국가구성 내지 창설적 기능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만을 전제로한 기능이다.

정답 ①

해설)채한태헌법 총론 p36 / 맥헌법 상 p17

- ① '지나친 경성'이 아닌 한, 경성헌법은 최고규범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관련되는 것은 경성헌법, 국가창설기능, 위헌법률심사제를 들 수 있다.
- ② 헌재판례(수도이전판례)로는 맞지만, 학설상 불문헌법은 보충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성문헌법이 관습헌법을 개폐할 수 있다.
- ③ 연성헌법이 신축성이 높다. 경성헌법은 시대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④ 국가 창설적 기능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한다.

문3. 세계 각국에서 인권사상이 헌법에 수용되는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7세기 영국에서는 일련의 권리장전들이 마련되었지만, 천부적 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
- ② 1787년 제정 당시의 미국 연방헌법은 인권조항을 담고 있는 세계 최초의 헌법이었다.
- ③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는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하였다.
- ④ 독일에서 인권보장헌법이 본격적으로 출현한 것은 1849년 독일제국헌법이라고 하겠으나, 이 헌법은 시행되지 못했다.

정답 ②

해설)② 1787년 미국헌법은 인권조항이 없고, 1791년 헌법에서 인권조항이 포함된다.

- ① 채한태헌법 총론 p22 / 맥헌법 상 p7
- ② 채한태헌법 총론 p23 / 맥헌법 상 p7
- ③ 채한태헌법 총론 p26 / 맥헌법 상 p10
- ④ 채한태헌법 총론 p27 / 맥헌법 상 p11

문4.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개정 없이는 폐지할 수 없다.
- ② 중앙선거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각급 의 의결에 있어서 위원장은 표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②중앙선거위원장은 중앙선거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① 채한태헌법 각론 p731 / 맥헌법 하 p671
- ② 채한태헌법 각론 p731 / 맥헌법 하 p671
- ③ 채한태헌법 각론 p732 / 맥헌법 하 p672
- ④ 채한태헌법 각론 p732유사 / 맥헌법 하 p672유사

문5.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의 목적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것이다.
- ② 긴급명령의 경우 동원되는 공권력은 병력이다.
- ③ 긴급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는 없다.
- ④ 긴급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②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677 / 맥헌법 하 p621

- ② 긴급명령의 경우 경찰력을 동원한다. 계엄시에는 병력이 동원된다.

문6.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인정된다.
- ②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
- ③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도중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다.

정답④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89 / 맥헌법 하 p337

①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법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당쟁의행위에는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이 면제되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없다.

② 단체행동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③ 단체행동은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도중에는 행사할 수 없다.

④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개시된 후에 행사할 수 있다.

문7.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립대학교가 대학교원 모집을 하면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② 사립대학의 특별전형 입학시험에서 동점자의 경우 연소자순으로 합격처리한다는 당해 대학 규칙에 대해서 진정할 수 없다.

③ 국내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은 한국산업규격(KS)상 특정색의 크레파스 색명을 '살색'으로 명명한 것에 대해서 진정할 수 있다.

④ 구금시설에 수용된 특정 종교인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당사자들만이 진정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89 / 맥헌법 하 p5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는 인권침해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진정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문8.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② 영주(永住)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일정한 요건 하에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③ 부재자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게만 인정되고, 재외국민이나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에게는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정답 ③

해설)채한태헌법 총론 p341 / 맥헌법 상 p331

①③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헌재 2007.6.28, 2004헌마644).

문9. 위임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법률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행정규칙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법원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권의 대상이 된다.
- ③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통해서 일정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의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776 / 맥헌법 하 p718

- ③ 시행령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문10.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전이나 본회의 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574 / 맥헌법 하 p528

- ① 소위원회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국회법 제57조 제7항).

문11.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력(水力)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② 사영기업의 국유로 이전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 ④ 헌법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과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① 수력은 특허할 수 있다. 채한태헌법 총론 p396 / 맥헌법 상 p377

② 사영기업은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한해, 국유화 할 수 있다. 채한태헌법 총론 p398

③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인정할 수 있다. 채한태헌법 총론 p396

④ 헌법은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한태헌법 총론 p402 / 맥헌법 상 p378

문12.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무죄추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 이외에 법관까지도 기속한다.

② 무죄추정권은 자기부죄거부특권(自己負罪拒否特)의 또 다른 표현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규정(제73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으로 보아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④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심판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직위해제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정답 ②

해설)② 자기부죄거부특권은 묵비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용어의 명칭상 차이일 뿐이다.

① 채한태헌법 각론 p218 / 맥헌법 하 p183

② 채한태헌법 각론 p215 / 맥헌법 하 p180

④ 채한태헌법 각론 p220 / 맥헌법 하 p183

문13.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효를 가지게 되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권이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동안 공소권이 없어 기소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공소가 이뤄지게 된다.

③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을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법원에 제소되어 있는 동종사건에도 미친다고 보고 있다.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823 / 맥헌법 하 p767

② 형벌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으면 소급효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 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형벌에 관한 법률은 실체법을 의미하므로 형사소송법이나

법원조직법 등 절차법에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14.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및 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검사의 기소가 없더라도 재직중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 ② 대통령이 형사상의 특권을 갖지만, 증인으로 소환될 수는 있다.
- ③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회의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 ④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신분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661~665 / 맥헌법 하 p605

- ① 대통령의 내란죄와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므로, 이 두 범죄는 공소시효가 종지된다.
- ② 대통령은 증인으로 소환될 수도 없다.
- ③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 대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④ 국회 탄핵소추의결 후 송달이 되어야 권한정지가 되고 사고사유가 발생한다.

문15.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관의 인적 독립이란 소송당사자나 타국가기관 등 외부작용으로부터의 심판의 독립을 의미한다.
-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③ 우리나라는 법관의 임기제도와 정년제도를 둘 다 두고 있다.
- ④ 법관이 중대한 심신(心身)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769,p771~772 / 맥헌법 하 p708

- ① 타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은 물적독립을 의미한다.

문16. 인민(peuple)주권과 국민(nation)주권의 특성을 열거한 것 중 올바르게 된 것은?

- | | |
|-------------------|--------------|
| ㉠ Montesquieu | ㉡ Rousseau |
| ㉢ 이상적인 민주주의 | ㉣ 순수대표제 |
| ㉤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전체국민 | ㉥ 대의제 |
| ㉦ 직접민주제 | ㉧ 자유위임 |
| ㉨ 기속위임 | ㉩ 보통선거제 |
| ㉪ 제한선거제 | ㉫ 필수적 권력분립제도 |
| ㉬ 임의적 권력분립제도 | |
- ① 인민주권-㉠,㉢,㉤,㉦,㉧
 - ② 국민주권-㉠,㉢,㉥,㉨,㉩
 - ③ 인민주권-㉡,㉢,㉤,㉦,㉩,㉪
 - ④ 국민주권-㉡,㉢,㉥,㉨,㉧,㉩,㉪

정답 ③

해설)채한태헌법 총론 p233 / 맥헌법 상 p225

인민주권에 대한 설명은 ㉠,㉡,㉢,㉣,㉤,㉥이다. '임의적 권력분립'은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원리와 관계된 것으로 권력통합과 관련된 개념이다.

문17.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이라고 판시하였다.
- ③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기관종사자의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④ 방송의 자유에서 방송이라 함은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의미한다.

정답 ③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297 / 맥헌법 하 p249

- ③ 우리나라는 '취재원비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18. 사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에 있으며,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 ②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그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 ③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하는 시혜적 조치로, 국회의 동의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잔형집행면제는 특별사면의 한 종류이다.
- ④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자의적(恣意的)인 사면권 행사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669 / 맥헌법 하 p613~614

④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로써,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헌재 1998.9.30, 97헌마404).

문19.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0인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만,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의할 뿐 제출권은 가지지 않는다.
- ②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일지라도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③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국회의 폐회 중에는 법률안을 환부하여 거부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574 / 맥헌법 하 p527

- ① 위원회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③ 대통령은 일부재의나 수정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대통령은 폐회 중에도 환부거부 할 수 있다.

문20. 국회 의사의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은 회의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② 국회의 의사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④ 의사공개는 의회주의의 기본원칙으로서 책임정치 실현의 불가결의 전제조건이므로, 예외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채한태헌법 각론 p567 / 맥헌법 하 p522

- ②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